

광주 전남 정치권·시민사회 “행정통합 신속하게 추진하라”

민주당 호남발전특위·혁신당·진보당 “소멸위기 통합만이 살 길”
시민사회단체, 추진위 구성 … 서명운동·토론회 개최 여론 주도

광주·전남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일제히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 정당과 시민단체는 통합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엇갈린 해법을 내놓으면서도 ‘통합만이 지역의 살길’이라는 대명제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통합추진에 힘을 실었다. 인구 소멸과 경제 낙후라는 현실적 위기감이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엇따라 기자회견과 출범식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

회견을 통해 통합 없이는 지역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특위는 광주와 전남이 이미 생활·경제권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행정만 분리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당이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광주전남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어지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물리적 결합을 먼저 이룬 뒤 세부 사안은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선(先) 통합 후(後) 조정’ 방식이다.

특위는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초광역 체제를

뒷받침하고, AI와 에너지 산업을 연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통합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내실’을 강조했다.

혁신당은 이날 회견에서 통합 논의가 단순한 몸집 불리기에 그쳐서는 안 되며, 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실효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혁신당은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조달적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들은 광주·전남 통합이 분권 구도의 근본적 전환, 산업 구도의 재편, 생활권 구도의 전환이라는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가칭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시’ 특별법을 통해 서울시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 권한을 보장해야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광주·전남 통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

북도까지 포함하고 주장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전남도당·전북도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와 전남을 넘어 전북까지 아우르는 ‘500만 호남대통합’을 제안했다. 광주·전남만의 소통합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역부족이며, 전북의 소외를 가속할 수 있다는 논이다.

진보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배치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통합은 백년대계인 만큼 정치인들의 선언이 아닌, 시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광주시민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주전남특별시추진위원회’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오승용 상임대표가 이끄는 추진위는 성명을 통해

산업 침체와 인구 유출 등 지역이 처한 복합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 측은 행정 경계로 인한 중복 투자를 없애고 광역 경제공동체로 전환해야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 될 경우 인구 320만 명, 지역총생산(GRDP) 150조 원 규모의 메가시티가 탄생해 부울경이나 대구·경북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진위는 향후 범시도민 서명운동과 토론회를 통해 통합 특별법 제정 여론을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전남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제시한 해법은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시급성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어 향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 시·도민 온라인 소통 창구 열렸다

시·도 누리집에 소통 코너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양 시·도가 온라인 공간에서도 시·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8일부터 시 누리집을 통해 ‘광주·전남 대통합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공간은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진행 상황을 가감 없이 알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천반 의견을 수렴하는 디지털 공론장 역할을 하게 된다.

플랫폼은 이용 편의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메뉴로 꾸려졌다. 통합 추진 현황과 로드맵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자료실’, 시·도민이 궁금해하는 점을 정리한 ‘주요 Q&A’,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 게시판’ 등이다.

전남도도 도청 누리집에 별도의 소통 코너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도는 통합 논의가 관 주도로 흐

르는 것을 경계하고 도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를 상시 가동하고 있다.

광주시는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시민 의견을 빅데이터화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통합 논의 테이블에 핵심 의견으로 올릴 방침이다. 단순한 의견 접수를 넘어 공청회와 설명회 등 대면 소통과 병행하며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밀바닥부터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김영문 광주전남통합추진기획단장(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시안인 만큼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시·도민의 집단지성을 모으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 대통령 “한중관계 전면 복원 든든한 토대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중국 국빈 방문의 성과에 대해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경제와 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협력 강화의 발판을 잘 구축했다”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네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의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

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힐 것이다”며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도 “국의 중심의 이재명식 실용 외교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요 외신은 공통적으로 한중 관계가 전면적 복원 국면에 들어간 점에 의미를 두고 안미경증(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구도를 벗어나 국의 중심 실용외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행보에 주목했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진영이 아닌 국익 중심의 외교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만과 일본 언론은 중국이 한미 일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려 한다고 경계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이에 동조하기보다 민감한 사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외교적인 유연성을 보여준 점에 주목했다”고 분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속도 못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민선9기로 공 넘어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이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찌감치 통합 논의를 선도했던 대구·경북은 사실상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다.

양 시·도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민선9기 체제에서나 논의를 본격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통합 문제를 차기 단체장의 땅으로 유보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중장기 과제로 공론화를 이어가겠다”며 기존 통합추진단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실무 부서로 이관했다.

대구시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선행돼야 시·도민 설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인 광역연합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소
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